

盧대통령-DJ 회동 정계개편 연결될까

# “민주개혁세력 대통합 신호탄”

## “내년 대선 판도에 큰 영향” 정치권 촉각 한나라 “특정지역 기반 정계개편” 반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동의 파장이 정계개편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동을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정계개편 과정에서 주된 지지기반인 호남마저 완전히 등을 돌리던 급격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을 맞을 수 밖에 없는 데다 북핵 실행 문제 및 경제 문제 등 겹겹이 둘러싼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김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노 대통령 입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회동은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노무현 배제론’의 정계개편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물론, 정계개편 논란 속에서 점차 좁아지고 있는 입지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예상보다 빨리 찾아오고 있는 레임덕 등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김 전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정계개편과 관련, 보다 유연한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본다”며 “즉 민주개혁세력의 대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북핵 실행 사태로 필생의 업적인 햇볕정책이 옹도 폐기될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번 회동에 나서게 한 배경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동안 북핵 실행 사태 이후 각종 강연과 인터뷰, 심지어 목포 방문 카드까지 동원하면서 햇볕정책 유지를 주장해왔던 김 전 대통령으로서도 노 대통령과의 협력에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영남과 호남 출신인 노 대통령과 DJ가 다시 손잡을 경우 내년 대선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만남은 민주개혁세력 대통합에 대한 시그널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의 회동은 그림

그대로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반영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 대해 ‘노 대통령의 항복 선언’이라는 일방적인 입장을 보이며서도 추후 정계개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김 전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민주당의

정계개편 구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한나라당은 이날 회동이 추후 이뤄질 정계개편의 폭을 넓히는 등 ‘반 한나라당’ 전선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동과 관련해 더 이상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계개편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며 이재오 최고위원도 “열린우리당이 당

을 깨고 이합집산 하겠다는 것은 ‘DJ’식 권력잡기 술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회동을 둘러싸고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내년 선거나 정계개편 등 정치적 주제가 끼어들 만남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 마저 정치공세의 대상인가’라는 홍보수석실 명의의 글을 통해 “당과 정치문제에 관해서는 일인만구도 없었다”면서 이같이 일축했다.

/임동욱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시민사회 단체 회원 80여명이 한나라당 중앙당사 상경 시위에 앞서 6일 오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김용갑의 원만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김용갑의원 사퇴하고 한나라 사과하라”

### 광주·전남 시민단체 회원 80명 ‘해방구’ 망언 규탄 상경 시위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6일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방문, 광주를 ‘해방구’로 표현한 김용갑 의원의 사퇴와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며 4시간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와 광주 YMCA 등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80여명은 이날 오전 전세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상경, 오후 3시 30분부터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한나라당 대표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김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해야 하며, 한나라당도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당차원의 책임있는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발에 앞서 이들은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갑 의원의 자신의 홈페이지에 발표한 사과문은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이 아니라 발언을 합리화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의 해명도 전무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2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6월 광주에서 열린 남북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에 대해 “2박3일간 행사장인 광주는 해방구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달 28일 기자회견과 항의서한을 통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한나라당의 입장조치를 요구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전효숙 인준안 처리 민주당 손에 달렸다

### “국회처리 거부 명분 없어 지역 여론 감안 당론 결정”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전효숙 후보자 국회 인준 강행 처리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국회 인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노당과 함께, 민주당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현재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은 열린우리당(국회의장 포함 141석) 의석과 민노당(9석) 의석을 모두 합해야 겨우 재적 과반수에 이른다는데 민주당의 협조는 절실하다.

그러나 여권의 다급한 입장에 반해 민주당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을 모은 뒤 국회 인준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에서 전 현재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 참여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기보다는 자유투표식의 절충안을 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즉 자유투표를 하되 전남출신인 전 후보자에 대한 지역 여론을 감안, ‘권고적 당론’을 통해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한화갑(신안·무안) 대표는 “개인적으로 전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는 지역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단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의 당론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원내대표인 김효석(담양·장성·곡성) 의원은 “최근 열린우리당 측에서 전 현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전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국회 논의절차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국회 처리 불가적 입장을 보였다.

이낙연(영광·함평) 의원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 찬성, 반대 등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당 차원에서 당론을 모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채일병(해남·진도) 의원과 김송자(비례·속(비례)) 의원은 “당론에 따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이상열(목포) 의원은 “현재소장 인준 문제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국회에서 전 후보자 인준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중식(고흥·보성) 의원은 “전 후보자가 자질과 도덕성 문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데다 절차적 문제점도 해소돼 현재소장에 임명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으며 손봉숙(비례) 의원은 “이전에 국회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몇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국회 인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최인기(나주·화순) 의원은 “절차적 문제가 해소됐다고 하지만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전효숙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국회 인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이승희(비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는 전효숙 현재소장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황장엽 “박근혜는 원칙 지키는 사람”

### 공개지지 입장 밝혀

황장엽(사진)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6일 “지도자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애국적 입장에서 헌신적으로 원칙을 지켜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표가 자기 부모 양친을 다 희생시키고 나라를 위하겠다는 게 기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내 강경 보수 세력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해 왔던 황씨의 이같은 언급은 내년 대선 국면에서 박 전 대표를 공개 지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황씨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당직자 모임인 ‘영민포럼’ 창립 기념세미나에 초청연사로 참석, ‘북한 핵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란 주제로 연설하던 중 강연 말미에 불쑥 박근혜 전 대표



기를 꺼냈다.

그는 “모든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요구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해선 안 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김정은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걸 잘못 해서 이 사람을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또 “실무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당이 보장해야 한다”며 “당에서 유능한 사람 모아서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지도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족과 국가를 위해 애국적인 입장에서 헌신적으로 원칙을 지켜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wangsook' (황소옥)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locations. The ad is divided into sections for 'Korea/Japan', 'Gyeongnam', and 'Miyu/Daegu/Busan'. It includes details about land area, building area, and price per unit. A large banner at the top reads '좋은 시골, 좋은 여생 - 신촌은 미생과 함께 하면 기쁨이 두배가 됩니다.' (Good countryside, good life - New village is twice as joyful with Misaeng). The bottom right corner features a 'Golf' section with prices for different golf courses.